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2가합8035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김○○ ()의 소송수계인
회생채무자 김○○의 관리인 김○○
대구 수성구
피 고 문○○ ()
대구 동구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희
변 론 종 결 2014. 9. 24.
판 결 선 고 2014. 10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. 7. 21.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() 증서
2011년 제 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
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희생채무자 김○○은 2011. 6. 1.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[REDACTED] 지상 [REDACTED]
[REDACTED]빌딩 중 지하 1층 일부, 2층 신관 전체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요양병원
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1. 6. 1.부터 2016. 5. 31.까지, 임대차보증금 3억
원, 차임 월 2,500만 원, 기자재사용료 월 2,000만 원(차임과 기자재사용료는 매월 5일
지급, 단 2011. 12.분까지는 차임과 기자재사용료를 합하여 월 4,000만 원)으로 정하여
임차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회생채무자 김○○과 피고는 회생채무자 김○○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. 7. 21. 공증인가 법무법인 [redacted] 증서 2011년 제[redacted]호로 채무자 김○○, 채권자 피고, 채무금 8억 원, 변제기 2016. 5. 31., 변제방법 2011. 6.부터 2016. 5.까지 매월 5일 상환, 채무종류 월 임차료, 채무자는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다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29826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김일선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, 2012. 12. 5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회생채무자 김○○은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다가 2013. 5. 31.경 병원을 폐업하

였다.

라. 회생채무자 김○○은 2013. 7. 18. 대구지방법원 2013회단3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(이하 위 신청에 따른 절차를 '이 사건 회생절차'라 한다)하여 2013. 7. 23.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, 2013. 8. 28. 10: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채무자회생법'이라 한다) 제49조, 제50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및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'이라 한다), 2014. 4. 7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.

마. 회생채무자 김○○은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737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,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채무자 김○○의 관리인 김○○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9. 12. 변론을 종결하고, 2013. 9. 26. 위 임대차보증금은 김○○의 미지급 차임 및 기자재사용료에 전액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, 갑 12호증의 2, 갑 13호증의 1, 갑 14, 19, 2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(이하 '이 사건 채무'라 한다)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소멸하였는바,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,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리인 김○○(이하 '관리인 김○○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채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것이라 믿었고, 관리인 김○○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채무를 다투고 있고, 채무금액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회생채권임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,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.

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회생채무자 김○○의 채무는 2012. 7.분 차임 중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1,300만 원, 2012. 8.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2. 12. 5.까지의 월 차임 합계액 104,032,258원 $[(25,000,000\text{원} \times 4\text{개월}) + (25,000,000\text{원} \times 5\text{일}/31\text{일})$, 원 이하 버림, 이하 같음], 2012. 7.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중단한 2013. 5. 31.까지의 기자재사용료 232,999,996원 $[(20,000,000\text{원} \times 11\text{개월}) + (20,000,000\text{원} \times 25\text{일}/31\text{일})]$ 합계 337,032,254원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공제된 3억 원 및 원고가 2013. 4. 26. 지급한 1,000만 원을 공제한 27,032,254원이 남아있으므로, 이 사건 채무 또한 27,032,254원이 남아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잔존채무액을 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각되어야 한다.

3. 판 단

가.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

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하면,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되고,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면, 회생

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,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김○○이 2013. 8. 28. 10: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, 2014. 4. 7.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은 사실, 김○○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기자재사용료채무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내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됨에도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을 면하였다.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가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미신고로 면책되어 소구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관리인 김○○이 이 사건 채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 하였으므로, 이 사건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

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,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,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,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,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나(대법원 2012.2.13. 자 2011그256 결정 참조),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실권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여야 할 것인데, 관리인 김○○이 피고와 회생채무자 김○○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737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원인으로 회생채무자 김○○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적어도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3. 9. 12. 무렵에는 회생채무자 김○○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,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 판사 유○○

 판사 이○○